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순항을 위한 제언

정 범 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학기술부 원자력사무관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자문위원
지식경제부 전력수급계획수립위원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역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2013~)

새 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여의 기간이 지났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어 새 장관이 임명되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췄다.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을 위한 부지 선정은 오랜 국가적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로 구분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경주를 중·저준위 처분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와 내용에 관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여 2009년 12월 방사성폐기물법에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약 1년간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한 바도 있다.

명확한 개념 설정, 방법론적 고민 필요, 원자력계 내부의 공론화, 각론적·직면적 접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의 손을 떠나서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 수렴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원자력 정책 결정 방식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손질될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 작업이 진행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순항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론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신월성 원전 2호기

원전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가능 연도(이 기간 후 포화) 자료: 한국형사성폐기물학회

2013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30년	포화
고리(신고리 이송 시 2016년)	월성	울진	영광(호기간 이송 시 2023년)	신고리·신울진·신월성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적 대표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할 것인지 혹은 다양성 원리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의견을 듣고 논의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생성하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고 알려져야만 위원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정부의 담당자가 바뀌고,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공론화 개념은 모호하고 혼란스런 상태에서 빠져 있다.

공론화가 보다 공개적이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 정책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수용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국민이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인지, 아니면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논리적 비약과 서로 다른 의견만 난무하는 공허한 토론의 장이 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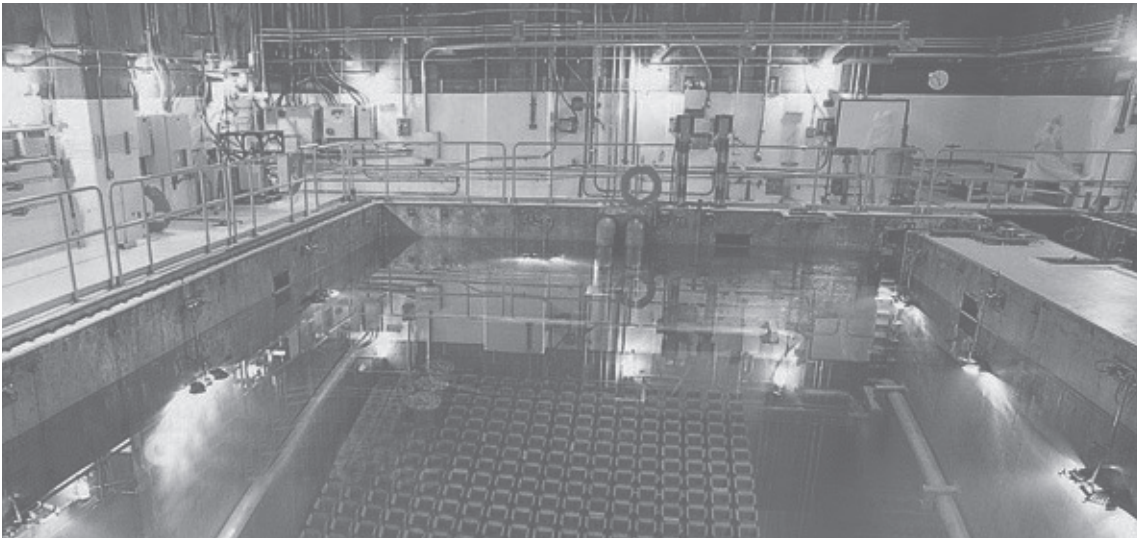
둘째, 공론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대표성과 다양성의 원리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적 대표성이 있는 인사로 구

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할 것인지 혹은 다양성 원리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의견을 듣고 논의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생성하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위원의 구성 방법, 위원회의 진행, 결과의 정리와 공개 등 세부적인 절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고 알려져야만 위원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논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원리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기본적인 틀과 원칙은 지금 정의하는 것이 옳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는 점을 원자력계가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 전문가가 현업에 매달려 남의 일 보듯이 관심도 없이 지내다가 뜬금없이 한마디씩 개인적 의견을 던지는 것은 공론화의 취지와 원만한 진행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못지않게 원자력계 내부적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한 논의를 우리 모두의 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구하거나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또 방법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각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게으름은 고치기 어렵다. 그러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보다 고치기 쉽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총론적이어야 하지만 풀 때는 각론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래 동안 공론화라는 추상적 수준에서의 총론만 고려했을 뿐 공론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문제와 이슈들을 선정, 이를 각론화하여 풀 생각을 하지 않은 듯하다.

다섯째, 이 문제는 직면하여 해결하여야 풀리는 문제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은 추진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피하기보다 직면해야 한다. 2009년 이후 정부의 움직임은 직면하기보다 회피로 일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조직이나 사회가 성실히, 소신껏 일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은 개인의 출세나 영달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 일을 직면하여 해결하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한 논의를
우리 모두의 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론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하

향적 계획 논리(DAD: Decide-Announce-Defend)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로 진전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원자력 사회가 받아들이고 제시한 것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라고 본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라는 표현에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서 십인십색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한 논의를 우리 모두의 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칫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만의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폭 넓게 국민 대중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구하거나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또 방법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조직을 갖출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